

# 이인영 “북한 개별관광 가능한 길 있을 것”

통일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한미워킹그룹 기능 부정 못해 인도적 협력 독자 추진 가능 주한미군은 주둔하는 게 맞아 한미훈련 규모 유연성 필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북한과 여권 일각에서 남북관계의 열림들로 지목한 한미워킹그룹에 대해 “대북제재를 효율적으로 풀어내는 기능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한미워킹그룹은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한미워킹그룹의 효율적인 제재 조율 기능은 인정하면서도 “제재 영역이 아닌 인도적 협력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추진할 수 있다”면서 “나아가 인도적 협력에 해당하는 부분은 교역으로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북한의 금강산 물, 백두산 물, 대동강 술을 남측의 쌀·약품과 맞바꾸는 방식을 예로 들며 “인도적 영역에서부터 작은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21일 남북회담본부 앞에서 취재진에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개별관광에 대해서는 “한미워킹그룹에서 어디까지 논의됐는지 확인 못 해 드린다”면서도 “코로나19 이전 (기준으로) 고려하면 가능한 길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

다”고 밝혔다. 또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와 방식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그에 맞춰서 북한이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주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정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자는 “남북관계 개선 과정에서 때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현재 우리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이 북측과의 단순 접촉까지 사전신고하도록 하고 통일부가 이를 ‘수리 거부’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지적에 “위헌적 요소와 기본권 침해 부분에 대해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이어 “정차 남북관계가 개선되며 많은 분야에서 교류가 이뤄질 때를 대비할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개선해야 한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 ‘행정수도 이전’ 뜨거운 감자 부상

여 “TF 구성해 반드시 완성”... 야 “국면전환용 안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행정수도 완성’을 23일에도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론을 맹비난하며 사실상 철회를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관습헌법에 얽매어 비효율을 방지하며 백년대계 중대사를 덮어놓을 수 없다”며 “여야 합의로 국민적 동의를 도출하면 관습 헌법을 앞세운 2004년 위헌 판결은 문제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행정수도 완성이 공론화된 이상 끝을 보겠다”며 당내에 우원석 전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행정수도완성추진TF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TF에서 당 차원의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앞서 제안한 국회 행정수도완성 특위 참가를 거부하는 미래통합당을 압박하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특히 부동산 문제로 수세에 몰리자 국면전환용으로 행정수도 문제를 꺼내들었다는 통합당의 주장을 일축하며 행정수도 완성의 본질은 국토 균형 발전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나는 정치를 알파카게 하지 않는다. 행정수도 완성은 2004년부터 일관된 민주당의 국정 철학이자 내 소신”이라며 “행정수도 완성 후 결과적으로 수도권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부동산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안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통합당의 비난 수위로 높아가고 있다. 전날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정진석 장제원 의원 등 당 일각에서 수도이전에 찬성 내지 긍정적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발빠르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대책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국민 원성이 높아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니 급기야 내놓은 제안이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얘기”라며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정부 정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인가”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수도권 집값을 잡지 못하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등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 느닷없이 행정수도 이전을 꺼낸 것”이라며 “국민이 민주당의 속셈을 모를 리가 없다. 빨리 거둬들이고 수도권 집값 폭등 등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위헌으로 판단한 2004년 헌재 결정을 여야합의로 만든 법률로 극복할 수 있다는 여당의 제안도 “다수당의 오만”이라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安 “서울시장 생각 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3일 내년 4월 열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설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이 반으로 나뉘어 있는 상황을 정치권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안 대표가) 문 정부에 대해 가장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당헌대로 하지 않고 썬수로 서울시장 공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민주 전남도당 위원장 김승남 단일화 합의

광주시당 위원장 ‘관심’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김승남(고흥·보성·강진·장흥) 의원을 사실상 도당 위원장 후보로 합의 추대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당 위원장도 경선보다는 합의 추대로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 19 정국 속에서 차분하게 시도당 위원장 경선을 마무리하고 지역 현안 해결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신정훈(나주·화순) 의원과 김승남 의원이 대화를 통해 도당위원장 후보를 김 의원으로 단일화하는데 합의했다. 앞서 도당 위원장 출마를 저울질 하던 주철현(여수·갑) 의원이 출마를 접으면서 전남도당 위원장 경선에는 김 의원이 단독출마하는 형태로 합의가 추진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신 의원이 지역 발전을 위해 통 크게 양보했고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광주시당위원장에 뜻이 있는 이병훈(동남읍), 조오섭(북구갑), 민형배(광산읍) 의원은 현 위원장인 송갑석(서구갑) 의원의중재로 회동을 갖고 합의 추대 여부를 논의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광주·전남시도당 대의원대회는 오는 8월 8일 열릴 예정이며, 같은 달 31일 광주시당 및 전남도당 위원장 후보 등록이 이뤄진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2주 정도의 선거 운동 기간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선거 운동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4일만 주어질 전망이다. 광주·전남지역 대의원 투표 50%와 권리당원 투표 50%를 합산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며, 단독 후보면 상무위원회를 개최해 찬반 투표를 통해 인준하는 절차를 가진다. /오광록 기자 kroh@

## ‘찬 109 vs 반 179’ 추미애 탄핵 부결

여야, 이탈표 해석 분분

미래통합당 등 야당이 발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탄핵안 표결에서 재석 의원 292명 가운데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표가 나와 부결 처리됐다.

여야는 찬성표에 더불어민주당 이탈표가 일부 포함됐는지를 놓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표인은 “당 소속 의원 176명 중 4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이탈표는 없고, 열린민주당 등 동맹으로 반대가 179표 나온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을 발의한) 110명 중 윤상현 하태경 박형수 의원 3명이 빠졌다”며 “기권(무효) 4개까지 민주당 쪽에서 6표 이상의 다른 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통합당과 국민의당 및 무소속 의원 110명은 지난 20일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등 두 명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결을 제외하고 국회에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실시된 것은 1999년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 이후 처음이다. 당시 탄핵안은 부결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민주당, 시장 재보선 무공천 논란 일단락

전재수 “당원 의견 물어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불을 지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관련 논란이 일단 수그러드는 모습이다. 이해찬 대표의 “지금 이야기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짜증 섞인 한마디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전날 “의견과 주장은 다르다”며 무공천 입장에서 물러선 이 지사 측은 “말바꾸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천에 반대하

던 “불가피하다면 국민에게 석고대죄 정도의 사죄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사와 마찬가지로 논리로 당원·당규를 들어 무공천론을 폄대 인사들도 속속 발언을 사실상 철회하고 있다. 부산시장위원장인 전재수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 “새로운 지도부가 당원과 국민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내년 선거에서 이거라도 인기가 8개월밖에 보장되지 않는다”며 내년 보선 공천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서 물러난 것이다. /연합뉴스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알고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 해방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신협 815 해방대출은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 상 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 출 한 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 출 금 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청단지점 576-4150